

사회

광주지법 배심원단 '온정 유감'

국민참여재판 8건 선고 분석... 잔혹 범죄 대부분 형량 낮아 반발도

#남편 김모(48)씨의 잦은 폭행에 시달리던 부인(40)은 지난해 여름 남편이 자주 마시던 음료를 병에 살충제를 넣었고, 이를 마신 남편은 병원에서 위 세척을 받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부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인이 범행을 저질렀고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배심원 판결을 배제하고 징역 2년 징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사건	검찰 구형	배심원 구형의견	재판부 권고형 범위	선고형
폭행치사 등	징역12년	징역3년, 집행유예4년 - 7명	-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살인미수	징역2년6월	무죄 - 7명	징역1년6월~2년6월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살인	징역6년, 치료감호, 부처명령10년	징역3년 - 5명 징역4년 - 2명	징역6년~10년	징역3년, 치료감호, 부처명령 10년
살인	징역8년	징역2년 - 4명	징역6년~10년	징역2년
강도상해	징역6년	징역4년 - 4명 징역5년 - 3명	징역3년6월~11년	징역4년
강도상해	징역4년	징역3년6월 - 7명	-	징역3년6월
살인 등	징역20년, 몰수	징역17년 - 5명 징역15년 - 2명	징역12년~17년	징역17년
강간 등 살인 무기징역		징역20년 - 6명 징역15년 - 1명	징역20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징역20년

국민의 법 감정을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자칫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한 배심원들의 '온정주의' 때문에 적절한 판결이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떨어지는 일반인들이 단일 사건보다는 범죄 당시의 상황보다는 동정심을 치우쳐 범죄 사실에 비해 낮은 형량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재판부도 시민배심원들의 판결을 대체로 인용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선고 형량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해 32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돼 9건이 채택됐으며, 이중 8건에 대해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지난해 21건에서 3건이 채택된 것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변호인들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배심원 기피신청을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여성 피고인 재판의 경우, 배심원 중 남성 수가 많을 때 일부 남성 배심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 높은 형량을 제시할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이다.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회사원 박모(37)씨는 "재판부에서 인정이 이끌리지 말 것을 당부하지만 실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동정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광주지방법변호사회 소속 이정희 변호사는 "제도 도입 이후 4년이 채 안됐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전반적인 국민의 법질서 의식이 향상되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완도에 내려간 이모(32)씨는 친구의 여자친구인 김모(32)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가 자리를 비우자 김씨를 다른 장소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또 신고하려던 김씨를 폭행한 뒤 질식사시켰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판결(징역 20년)을 감안,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잔혹한 범죄 수법에 비해 형량이 낮아져 문제를 제기했다.



음주 차량 골라 사고후 합의금 챙기고 '나이롱 환자' 입원 병원 협박 돈 뜯어

경기 침체와 함께 음주운전이나 병원들의 의료비 허위·과다 청구 등의 약점을 이용, 공갈·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일 "지난 30일 새벽 시간대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1000여만원을 뜯어낸 김모(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7시경 광산구 소촌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이모(35)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사실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는 등 최근 10개월간 음주운전차량과 6차례 사고를 내고 105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피해자 오모(39)를 상무지구 먹자골목에서부터 약 1km를 뒤따라가다가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오씨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일체가 발각됐다. 광주남부경찰청은 또 이날 광주 모 한방병원에 찾아가 환자가 없는 입원

병실 사진을 보여주면서 "가짜 환자를 입원시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보험공단 등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00만원을 받는 등 병원 3곳으로부터 1000만원을 뜯어낸 이모(48)씨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밤늦은 시간에 문병객을 가짜 환자를 돌려 외출한 환자의 침대와 성명 등을 캡처,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해 사진을 확보한 뒤 병원장이나 사무장을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병원 사진을 수십 장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미뤄 여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 등을 추궁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도의원 공천현금' 한화갑 항소심 무죄

최인기 의원 등 4명도 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한)는 1일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 비례대표들로부터 공천현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 의원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공천현금을 제공한 박부덕·양승일 전 도의원 등 4명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제공한 시기와 규모 등을 살펴보면 의심을 살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 대표는 200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최 의원, 조직위원장인 유구청장 등과 함께 공천현금 명목으로 전남도의회 비례대표인 박씨 등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공공기관 장애인 외면

주민센터·보건소 등 접근성 개선 안돼

점자 안내판 설치 미미 인권위 모니터링 결과

광주 지역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는 등 장애인 차별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주민센터 19개소와 보건소 14개소에 대해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 편의 제공, 웹 접근성 등 3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주민센터는 47.7%, 보건소는 53.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센터의 경우 입구에 점자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장애인 유도장치를 규정에 맞게 설치한 곳은 5.6%에 불과했고, 층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곳은 11.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구에 회전문이 설치된 기관의 경우 장애인의 접근을 위한 자동 또는 미닫이문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만족시킨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소의 경우 진료대 등에 휠체어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된 곳은 15.4%에 불과했으며, 진료실 앞 점자표지판 설치 23.1%, 주출입구 장애인 유도장치 설치 16.7%, 점자자료·확대문서·보이스카드 제공은 15.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다양한 기관과 사회구성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차별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현안이며 개선해야 할 과제다"라고 지적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나원침 (8451) 김장두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행각 3명 구속 영장

불법 주정차 화물차 번호판 가리기 백대

1일 광주시 서구 양동상가 일대에 불법 주·정차 중인 화물차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교묘한 방법으로 가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초의원 이사 재직 어린이집 불법 매대

서부경찰, 내사 착수

광주서부경찰은 1일 "현직 기초의원 이사로서는 국가 소유 법인 어린이집의 불법 매대 정황을 포착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광주시 서구의회 A의원이 이사로, 남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광주시 서구 모 법인이 어린이집이 최근 법인의 대표이사

하고 시설장을 교체하는 등 통상적인 불법 매대 사례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 또 보육시설 관계자로부터 어린이집이 올해 3월께 수익원에 거래했고, 일부 이사는 매대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가 소유인 법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매대를 금지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병원장이 의약품 리베이트 21억 받아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일 응급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한 국가보조금과 건강보험급여를 편취하고 거액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사기·약사법 위반)로 부안의 모 종합병원 원장 A(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면서 공사 금액이나 장비 대금을 부풀려 6억1000

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간호인력을 허위로 꾸미거나 가짜 치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건강보험급여 8억 6000만원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어머니 사진 내보이자 범행 지백

○-검거된 뒤 범행을 부인하던 20대 절도범이 경찰이 어린 시절 헤어졌던 어머니를 찾아주자 순순히 자백. ○-화순경찰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모(28)씨가 또 다른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요마를 찾아줄 수 있느냐"는 남씨의 요청에 경찰이 출생기록이 담긴 호적등본을 추적해 어머니 사진을 찾아 내보이자 태도를 바꾼 것. ○-남씨는 경찰에 "지금 교도소에 있어 어머니가 슬퍼할 것 같다. 출소하면 어머니를 만나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대학편입 정원 대폭증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3학년입학 / 2년재학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영어(인문) / 영어,수학(자연)
각 군별 1회 지원		대학별 지원(최다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12월 19일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